



3면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 구축할 것”

# 전주매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음 9월 16일) 제28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차기 정부 전북 산업 대개조 마중물’

### 도, ‘제20대 대통령 전북도 공약사업’ 발표

#### 8대 지역·3대 초광역 아젠다별 사업 발굴

#### 총 27조7997억 규모 발굴한 사업은 65개

전북도가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전북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전북도 공약사업’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북 공약사업은 총 11(8대 지역, 3대 초광역)대 아젠다별 사업 65건, 총사업비 27조7,997억원이다.

전체사업중 1,000억원 이상 사업은 43건(66.2%)이고, 신규사업 발굴은 43건(66.2%)이다. 또한 등부권 사업은 8건 12.3%(사업비 3조516억원, 총사업비의 10.9%)이다.

11(8+3)대 아젠다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의 큰 틀을 바탕으로 SOC 조성 및 생태문명 선도 등의 내용을 추가해 분야별로 구성됐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 도는 기후변화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동차, 조선, 기계, 농

업, 문화관광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미생물/농생명치유), ▲전년 역사 문화·여행체험 1

번지 등의 3개 아젠다를 추진한다.

미래신산업 육성에서 도는 수소, 데이터, 바이오, 탄소 금융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선점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수소·데이터·바이

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탄소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 ▲금융특화 거점 육성 등의 3개 아젠다를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SOC·생태문명과 관련, 전북도 산업지도 전환을 위한 인프라·개념으로서 SOC·생태문명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했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사회 전환,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SOC, ▲3대 초광역 사업 등의 5개 아젠다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아젠다 추진정책에 맞춰 8개의 지역 아젠다와 3개의 초광역 아젠다별 공약사업을 구성했다.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과 관련,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를 위해 글로벌 대체부품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해 국가 그린수소 전주주 산업벨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탄소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과 관련, 탄소산업의 비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소재 국가선도 2단계 확산사업 추진,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연구개발단지를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핵심수요 기반 확대를 추진,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장비(MRO)단지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과 관련, 종자산업 선점하기 위해 국제종자비료화장 구축과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 단지 조성사업 등 5건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전환과 관련,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서 생태문명원 조성 사업, 민경·동진강 생태·문화 누림을 추

진한다. 또한,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안전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한다.

천년역사문화·여행체험 1번지에 대해, 마한토 발굴·정비 및 활용을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 국립전북소초종합휴먼원 등의 사업, 전북 웰니스관광 휴양벨트,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등을 구축한다.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SOC와 관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새만금 글로벌 해양자유단지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금융특화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북 특화 금융거점도시 육성, 강소권역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3대 초광역 아젠다와 관련, 충청권과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부

권과의 연계·협력을 앞당긴다. 대구·경북권과는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해 국토 내륙의 동서축 구축과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광주·전남권과는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물류 지원 및 서해안 개발을 강화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 혁신성장대 대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공약사업을 도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해 기존의 발굴 추진단을 기능 전환해 ‘공약 반영 추진단’으로 운영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공약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부산 엘시티 버리와 관련된 판별을 꺼내 보이고 있다.

##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 ‘대장동 사건, 돈 받은자가 범인’

### 김윤덕 의원,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 민간개발 주장 증거 영상 제시 이재명 도지사 “국민의힘 주장, 양의 탈을 쓴 이리 ‘양두구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 이명박 전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인사들이 민간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공공개발을 안해 이익환수를 5,000억 밖에 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를까”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0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금 다시 하라 해도 대장동 사업을 그때처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꼭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답했다.

여당 간사로 직위를 시작한 김윤덕 의원은 “야당의 대장동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론 ‘확증편향’이라면서,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정보가 유리한 정보일 경우 맹신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바로 그렇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8월 31일 경기지역 한 인터넷 언론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9월 12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장기표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 대우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보도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수익이라는 사회부조리와 이재명 후보 아들 재직이라는 가짜 뉴스가 공작돼 나온 이미지로 일반인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에 진실은 필요하지도 않고, 단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만 안되면 되는 이슈일뿐, 진실은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 지금의 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러나 화천대우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 과상도의 의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과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것은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집단으로 민영개발을 주장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5,000억원이 아니라, 수조원의 돈이 토건 업자들은 물론, 이들과 유착한 야당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고초를 겪더라도 그때처럼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문제로 음해당하고 의심받고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원을 빌려 내가 개발 중인 땅을 다 샀는데 민

는 구석이 있어서이고, 당시 국민의힘과 개발 사업자들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지난 2011년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 사건만 빼고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민간개발과 유착은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4년 수리검정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했더라면 공공개발 저지도 없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과 민간들이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이들이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통해 모두 다 환수를 해서 성남시민들 더 풍족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양의 탈을 쓴 이리 양두구육이다”면서 “당시 자신들이 민간개발 주장을 강력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왜 공공개발 안했느냐, 100%환수를 안했느냐로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니까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주산**